

석사학위논문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보 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박 상 준

2006

석사학위논문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 상 준

지도교수 김 보 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일

박상준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12월 일

위원장\_\_\_\_\_

위 원\_\_\_\_\_

위 원\_\_\_\_\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고찰 .....	5
제1절 외국인범죄의 의의 .....	5
1. 외국인의 의의 .....	5
2. 외국인범죄의 개념 및 특징 .....	5
3. 최근 외국인범죄의 특징 .....	7
제2절 외국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	9
1. 외국인범죄의 원인 .....	9
2. 외국인범죄의 실태 .....	16
제 3 장 외국인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실증분석 .....	31
제1절 외국인범죄 수사의 문제점 .....	31
1.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문성 부족 .....	31
2.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 필요 .....	34
3.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문제점 .....	35
4. 협력수사의 필요 및 수사부담의 가중 .....	39
제2절 외국인 범죄 수사 관련 실증조사 .....	42
1. 조사 설계 .....	42
2. 분석결과 및 해석 .....	44
제 4 장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	69
제1절 외국인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	69

1. 수사조직의 정비와 예산지원 .....	69
2.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보와 교육 .....	71
3.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통역 활성화 .....	73
제2절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 .....	75
1.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 .....	75
2. 외국 사법기관과의 공조 .....	76
3. 국제경찰협력 .....	76
제3절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개선 .....	77
1. 입국사증 부정발급 및 위조 여권의 예방 .....	77
2. 외국인범죄경력관리제도 개선 .....	78
3.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의 재검토 .....	80
제4절 협력 수사 환경 조성 과 수사원칙 .....	80
1. 초동수사와 탐문수사 .....	81
2. 용의자 등의 신원파악 .....	81
3. 용의자 소재 추적수사 .....	82
제 5 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7
ABSTRACT .....	90
설문지 .....	92

##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외국인 출입국 현황 .....	17
<표 2-2>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	17
<표 2-3> 연도별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	18
<표 2-4>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 .....	26
<표 2-5> SOFA(미군 등)범죄 단속 현황 .....	28
<표 2-6> 통역센터 활용 실적 .....	28
<표 2-7>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	29
<표 2-8>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현황 .....	30
<표 3-1> 설문지의 구성 .....	43
<표 3-2> 경찰 계급 인원과 구성비 .....	45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46
<표 3-4> 외국인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 능력 .....	47
<표 3-5> 수사관련 교육 실태 .....	49
<표 3-6>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문제점 .....	51
<표 3-7>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	52
<표 3-8>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 .....	54
<표 3-9>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제도 및 환경 문제점과 경찰 내부 문제점 .....	55
<표 3-10>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	56
<표 3-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 심각성 정도 차이 .....	57
<표 3-12> 외국인범죄의 증가 가능성 정도 차이 .....	59
<표 3-13>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 정도 차이 .....	60
<표 3-14> 수사 관련 교육 효과의 차이 .....	61
<표 3-15>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 차이 .....	63
<표 3-16>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화 정도 차이 .....	64
<표 3-17> 외국인범죄관련 경찰 내부의 문제점 차이 .....	66
<표 3-18>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차이 .....	68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외국인범죄는 크게 입국과 취업을 위한 범죄, 국내 생활 중 범죄, 범죄목적 입국자의 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정책 방향이 외국인 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취업의 문을 넓히고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생활 중 범죄, 범죄목적 입국자의 범죄 비중이 향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범죄의 발생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범죄가 1999년 이후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sup>1)</sup> 특히, 사기나 문서위조 등 지능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2004년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수는 9,103명으로 2003년(6,144명)에 비해 48.2% 증가했다. 1999년 3,012명이던 외국인 피의자는 2003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불과 1년만에 다시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중국 동포 포함)이 3,9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843명), 몽골(490명), 러시아(465명), 베트남(309명)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문서위조나 사기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1,965명으로 2003년(834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4년 불법체류자(18만 8483명)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93만 9,356명으로 전년도(81만 6,74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범죄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가 2004년 고용허가제도로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

1) 동아일보, 2005. 2. 12, p. 12.

이뤄짐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여권위조나 위장결혼 등이 다수 적발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sup>2)</sup> 최근 외국인범죄자 중 16%가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sup>3)</sup> 2005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해외범죄 조직 중 일본 야쿠자와 홍콩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등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사이의 이권 분쟁에 따른 총격 사망사건은 국내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04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가 러시아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아편과 해쉬쉬 등을 밀반입해 판매한 러시아인 등 일당 28명을 적발한 예도 있다. 일본과 홍콩의 범죄조직이 국내로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있는데 2001년에는 조직원 540명을 거느린 일본 야쿠자의 중간보스가 총기를 밀반입한 뒤 한국으로 피신해 은신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04년에는 미국·유럽은행이 발행한 외국인 명의 위조 신용카드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4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홍콩인이 검거되기도 했다. 2004년 발생한 외국인 마약범죄는 전체 외국인범죄의 3.1%를 차지해 내국인 마약 범죄비율 0.2%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잠적하면 소재지 파악이 내국인보다 어려워 수사에 애로가 많다. 외국인범죄는 지문정보도 없고 연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범죄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범죄 직후 출국하면 대부분 수사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출입국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

---

2) 현재 16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의 경우, ‘방문취업비자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며 기타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범죄 역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내일신문, 2006. 1. 10, p. 22.

소,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사이의 수시협의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범죄 총괄부서는 없다. 전문 수사 인력 부족도 외국인범죄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보고, 일선에서 외국인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외국인범죄수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심각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국인범죄 양상을 비교 검토하여 국내 외국인범죄 대책으로서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의의 및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범죄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검증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범죄수사에 대



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자료를 통하여 기술적인 분석과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외국인범죄의 의의 및 실태와 외국인범죄 관련 현황 등을 정리한 후 정부·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서울·경기 지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외국인범죄 수사의 제도상·운영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외국인범죄의 의의

#### 1. 외국인의 의의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법률 제 5431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2조 제1항은 ① 출생한 당시에 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출생하기 전에 父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등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조건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2. 외국인범죄의 개념 및 특징

외국인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sup>4)</sup>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나,

---

4) 황인정,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검찰, 통권 제104호, 1992, p. 215.

刑法 제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외국인범죄는 크게 입국관련 범죄, 외  
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sup>5)</sup>

외국인범죄가 일반적 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외국인범죄는 실제 수사 실무상 그 검거와 증거수집이 일반 내국인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우선 내국인이 참고인으로서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할 때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그 동일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증명하기 어렵고 수사관들도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수사진행을 신속  
하게 하지 못하며 통역인을 구한 후에 법 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  
서 수사의 신속성이 결여되는 관계로 증거 소멸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따르  
게 된다.

둘째, 외국인들은 자국의 형사절차법과 다른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법에 따  
르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임의출석  
을 거부하고 변호인 없는 가운데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모  
국어로 번역하지 않는 한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의 처리가 외국인이란 점에서 내국인보다 관대  
한 편이고 재판확정 후 강제출국 조치를 고려해 거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최근에 드러나는 외국인범죄의 행태상 특징으로는, 첫째, 범죄의 집단  
화이다. 중국 등 일부국가의 불법 체류자들이 수 명에서 수십 명 단위로 범  
죄 집단을 구성, 자국의 산업기술연수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불

---

5) 최인섭·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p. 201-202.

범행위를 하고 있다.

둘째, 외국 범죄조직과 연계되고 있다. 러시아 여성 매춘, 마약, 총기밀매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범죄는 삼합회, 마피아, 야쿠자 등 외국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범죄가 광역화·기동화되고 있다. 동남아, 남미, 아랍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전국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sup>6)</sup>

### 3. 최근 외국인범죄의 특징

#### 1) 조직화·흉포화

외국인범죄가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데다가 동남아 및 중동지역 국가에서 취업목적 입국자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범죄는 절도, 네다바이, 성범죄 등에 국한하지 않고 사기, 불법 모델 활동과 매춘, 밀수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범죄조직을 만들어 자국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경찰청에서 분석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외국인범죄 현황에 따르면 폭력범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8)</sup>

6) 경찰청, 「외국인범죄 종합대책」(서울: 경찰청, 2003), p. 124.

7) 동아일보, 2005. 01. 24. p. 22.

## 2) 국제화

외국인범죄의 국제화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을 원산지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여 들여오는 사례나 국제적 밀수조직이나 폭력조직에 의한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가담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야쿠자가 호텔과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카지노 투자 등을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매춘, 마약밀매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범죄조직인 삼합회 등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틈을 이용하여 마약밀매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인의 불법입국 주선, 한국 제품의 중국 밀수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밀반입 등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 3) 광역화 · 기동화

외국인범죄도 내국인에 의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광역화 · 기동화되어 가고 있다. 불법체류자 ·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들이 전국에 산재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외국인범죄가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의 대도시권과 인근의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으며, 범행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수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3-5명이 무리를 지어 금은방, 수퍼마켓, 주유소 등 현금 취급업소에 고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흥정 또는 환전하는 과정에서 특정 숫자나 기호가 있는 돈을 요구하며 업주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현금, 귀금속류를 절취하여 주변에 대기시켜 놓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네다바이 수법의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8)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13.

9) 상계백서, p. 312.

## 제2절 외국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 1. 외국인범죄의 원인

실제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하에서는 기존의 범죄 원인론의 연구를 이용해 범죄의 개인 환경적 원인과 경제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중에서 외국인범죄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개인·환경적 원인

##### 가. 직업

직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직업의 유무와 범죄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이유로 재산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장기실업자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기존의 범죄 원인론에 따라서 외국인범죄자의 직업을 분류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합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기술연구직, 어학강사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합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직업상 화이트칼라의 범죄성향을 가질 것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은 통상적으로 암수가 많으므로 범죄통계상 잘 나타나지 않아 파악이 어렵고 대책 수립도 매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0)</sup>

---

10) 윤덕중, 「범죄사회학」(서울: 박영사, 1982), pp. 183-185.

두 번째 유형은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남자의 경우, 불안정한 단순노동자로서 공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의 성향이나 교육수준은 일정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범죄원인론에 의한다면 이러한 직종은 범죄성이 문제된다 할 수 있고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실업자의 범죄율 다음으로 높다. 여성의 경우 단기체류, 홍행 등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풍속관계사범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단순노동자로서의 불법취업외국인 급증은 외국인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의 불법취업의 경우 윤락행위는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입국과 관련하여 외국 범죄조직과 취업알선 조직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 윤락여성의 수입금 착취·갈취 등 제2의 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연령

각국의 범죄통계에 의하면 대체로 20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계층이 최고의 범죄율을 보이는데, 사회적응 방식의 왜곡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고, 강력범죄와 과실범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sup>11)</sup>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범죄자의 연령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범죄성과 연령과의 관계를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취업자(불법취업자 포함)임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범죄자는 40세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90% 이상이 20세 이상 35세 미만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

11)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서울: 법문사, 1996), pp. 119-121.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 2) 경제적 원인

경제적 환경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경제적 환경과 범죄성에 관련된 인자로는 외국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과 빈곤 문제를 들 수 있다.

### 가. 경기변동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 생산관계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호황과 불황이라는 경기의 주기적인 변동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호황기에는 생산과 거래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생산과 거래가 줄고 실업이 증가하며 기업이 도산하며, 이러한 경기변동은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경제생활과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2)</sup>

경기변동과 범죄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종래의 연구를 종합한 서덜랜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범죄율은 불황기에 그리 증가하지 않는다. 둘째 중대범죄는 불황기에 경미하고 불규칙적으로 증가하고 호황기에 감소한다. 셋째 폭력을 수반하는 재산범죄는 불황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절도와 같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범죄는 매우 경미하고 불규칙적으로만 증가한다. 넷째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알콜 중독은 호황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째 대인범죄는 경기순환과의 사이에 어떠한 규칙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

---

12) 배종대, 「형사정책」(서울: 홍문사, 1998), pp. 222-225.



는다. 여섯째 소년비행은 호황기에 증가하고 불황기에 감소한다. 그러나 그는 최종 결론에서 범죄와 경제적 상태의 관계를 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원인론과 비추어 보았을 때 경기변동과 범죄성과의 상관관계는 뚜렷한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경기에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기존 외국인 취업자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강도·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1998년 서울올림픽 이후 호황국면으로 경기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물가·임금이 동반 상승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취업자, 특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취업자의 비중을 증가시켰다.

#### 나. 빈곤

경기변동과 범죄와의 관계가 거시적 차원에서의 범죄유발요인이라고 한다면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범죄자의 개인적 경제상태가 범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대체로 범죄성과 빈곤의 관련성을 긍정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실체적 논거를 보면 첫째, 수형자와 기타 범죄자 집단 가운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빈곤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경제상태가 서로 다른 지역의 범죄 및 범죄자율을 서로 비교할 경우 빈민 지역 등 경제상태가 낮은 지역의 범죄 및 범죄자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들고 있다.<sup>13)</sup>

---

13) 신진규, 「형사정책1」 (서울: 법문사, 1997), p. 253.

경제적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절대적 빈곤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범죄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 빈곤 역시 범죄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 자체가 범죄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빈곤에 수반되는 열등감, 좌절감, 소외, 아노미, 목표와 그 달성수단의 단절, 가정의 기능적 결함 등이 매개로 되어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은 월 평균 50-8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자국임금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약 10배 정도 많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와 일부의 외국인 불법취업자는 고임금을 받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은 이중구조를 가진다 할 것이다.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의 임금은 자국 내의 노동자보다는 훨씬 많지만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적은 임금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대부분 고국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귀국할 때에 임금을 저축하여 고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거의 생존유지수준의 빈곤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빈곤한 계층은 주거지역을 비행하위문화지역(Delinquent Subculture Area)을 형성해 범죄와 친밀성을 갖게 되고 2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 중 단순노동자들은 구로·영등포구 일대, 성동구 소규모 공장밀집지대,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김포, 남양주, 화성, 경기 광주 등 외국인 고용업체가 밀집된 곳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곤과 관련된 범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이 슬럼화되어 비행적 하위문화지역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4)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정책제안",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보고서」, 새천년민주당 외국인보호대책기획단, 2000, pp. 4-7.

### 3) 사회문화적 원인

#### 가. 문화갈등이론

문화갈등(Culture Conflict)이란 용어는 셀린(T. Selli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셀린의 문화갈등은 행위규범간의 갈등, 즉 사회적 가치, 이해 및 규범 등의 충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셀린은 문화갈등과 범죄현상과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는데, 첫째 문화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행위규범이 모호하고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보다 용이하게 범죄나 일탈행위에 끌리게 되며, 둘째 지배적인 문화의 행위규범만이 법제화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의 행위규범을 따르다 보면 법과 자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5)</sup>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이후 불법취업·체류의 장기화로 인해 범죄원인의 하나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민의 범죄율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민족에 따라 그 이주지에 있어서 범죄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민족간의 범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고국에서 동화된 전통의 견고성과 지속성(the strength and consistency of the tradition)의 정도가 각각 다르고, 이민의 실시방법에 따라서 범죄성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국에서 동화된 전통이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우는 서로 단결해 도우며 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적고 반대인 경우에는 문화갈등을 일으키기 쉬워서 범죄로 나아가기

---

15)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p. 184.

쉽다고 할 수 있다. 이민의 범죄율이 이민국 국민의 범죄율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고국의 범죄율보다는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과 이민 2세의 범죄율이 이민세대보다 상승한다는 점은 문화갈등을 주원인으로 하는 이민의 범죄 원인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필리핀·파키스탄 등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들과 중국교포들이 겪는 악덕 고용주에 의한 임금체불, 과도한 근무시간, 산업재해, 고용주 및 한국인들에 의한 무시와 홀대, 욕설 및 폭행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반감으로 인한 즉흥적·우발적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 다. 동료집단의 형성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영세 제조업체들이 산재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며, 이국땅에서의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고 자기네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동료집단은 보통 외국생활 중 향수를 달래고, 상부상조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동료집단 내의 절도 등 생계형 범죄 및 개인적 불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폭력·강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토양을 제공하며, 실업 등을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

16) 세계일보, 2003. 9. 17, p. 21.

## 2. 외국인범죄의 실태

### 1) 외국인 현황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의 체류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는데 장기는 91일 이상을 의미하며, 단기는 90일 이하를 의미한다. 체류자격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신분자격을 말하며, 관광·상용·취업 등 34개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을 찍어야 하며, 한번 지문을 찍은 외국인은 다시 찍을 필요는 없다.<sup>17)</sup>

### 가. 출입국 현황

<표 2-1>은 연도별 외국인 출입국 현황이다. 1999년의 8,980,455명을 기준으로 매년 약 5.95%의 외국인 출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출입국자수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한 11,613,460명으로 산정되며 이는 1999년 대비 29.3%가 증가한 것이다.

---

1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용인: 법무연수원, 1997), pp. 75-76.

<표 2-1> 연도별 외국인 출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출입국자	8,980,455	10,320,541	9,994,484	10,338,323	10,953,453	11,613,460
전년대비 (%)		+14.9	-3.2	+3.9	+5.9	+6.0
지수	100	124.9	121.0	125.6	121.9	129.3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08

#### 나.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표 2-2>는 2004년 현재 국적별 외국인 체류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체류 외국인은 총 667,520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태국, 대만, 러시아의 순으로 구성비율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인이 전체 체류 인원의 총 3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동포	한족			
계	667,520	122,799	115,713	25,849	104,301	30,858
장기	305,347	53,063	40,278	22,579	38,609	16,604
단기	362,173	69,736	75,435	3,270	65,692	14,794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기타
2,254	3,029	17,301	32,842	28,925	16,610	167,039
1,479	1,364	4,210	21,003	7,942	2,279	96,477
775	1,665	13,091	11,839	20,983	14,331	70,562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24

다.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표 2-3>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 10만 명이 조금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였으나, 2년만인 2001년에는 그 수가 2배로 증가한 약 26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2004년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30만 명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수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00%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3> 연도별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체류자수	135,338	188,995	255,206	289,239	306,382	321,415
전년대비(%)	.	+ 39.6	+ 35	+ 13.3	+ 5.6	+ 6.1
지수증감율	100	189.9	256.4	290.6	307.8	315.7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15

라.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현황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의 경우, 1997년에 약 6,000건의 단속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5년 동안 계속하여 단속이 감소하고 2002년은 1997년의 10%에도 미치지 않은 516건만을 단속하였다.<sup>18)</sup> 이런 단속실적의 저하는 곧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외국인범죄 증가와도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유형별 외국인범죄 현황

18)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29.

여기에서는 외국인범죄를 크게 ① 출입국과 관련된 범죄 ② 외국인이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범죄 ③ 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자의 범죄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범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면 두 번째 유형인 ‘생활 중에 일으키는 범죄’가 가장 많으며 전체 사건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주요 외국인범죄가 대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됨에 따라 일상 생활하는 중에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유형인 출입국 관련 범죄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입국 관련 범죄의 대부분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리되므로 위반자가 출입국사범 통계에 흡수되고, 그들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세 가지 범죄 유형별로 정리, 분석하고 그 사례를 제시하였다.

#### 가. 입국 관련 범죄

##### (1) 출입국 사범(여권 및 사증위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외국인이 입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인 경우에도 ①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나, ②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



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범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여권의 위·변조나 사증의 위조와 같이 각종 서류의 위조, 부정취득에 의한 불법입국이다.<sup>19)</sup>

출입국 관련 각종 서류의 위·변조유형은 위조여권, 위조사증, 사진교체, 기재사항변조, 사증변조 및 편철, 심사인 위·변조, 타인명의 여권사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불법체류와 관련 범죄

불법체류는 정식의 입국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당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단기체류의 자격(관광, 기술연수, 단기 입국허가 등의 형식)으로 입국하면서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체류기간을 어기게 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체류라는 신분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주로 불법체류사실을 감추기 위한 문서위조이다. 예를 들면 브로커들이 한국 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출국권고서(체류기간 연장 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대량으로 위조하는 사건이 두드러진다.

## (3) 불법취업 관련 범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 취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 연구의 7개 부문이다.

불법취업은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불법취업 유형과 합법체류 상태에서의 불

---

19) 배종대, 전계서, p. 401.

법취업 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불법취업의 대다수는 첫 번째 유형인 불법채류 상태에서의 불법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부분은 형식상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 자격,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허가의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기 때문이다.<sup>20)</sup>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업알선을 하는 행위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불법고용이나 직업알선 범죄 등은 피의자가 반드시 외국인은 아니지만, 불법취업을 만연시키고, 나아가 제3의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외국인범죄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불법취업 알선조직은 취업알선 수수료의 탈취를 목적으로 외국의 불법 취업알선 조직과 국내의 취업 브로커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규모나 조직력의 정도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의 경우 취업을 알선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취업에 필요한 여권이나 사증까지 위·변조하게 되며, 심한 경우 취업알선 수수료를 둘러싼 이권으로 인해 범죄조직 간의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 나. 외국인의 국내 생활 중 범죄

외국인범죄의 세 가지 유형 중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범죄’는 가장 큰 비중

---

20) 김철완, “외국인 취업자 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p. 159-160.

21) 김시평, “외국인 노동자유입에 따른 대책소고”, 법조, 제414호, 1991, p. 79.

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전체 외국인범죄 중 발생빈도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범죄피해의 영향력이 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포함되며,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과 같은 범죄가 포함된다.<sup>22)</sup>

취업 목적의 외국인 불법입국과 외국인범죄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최근 외국인범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피의자와 동일 국적인 범죄 피해자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일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흉악사건이 많아졌으며, 둘째 외국인범죄 피의자의 국적이 다양해졌고, 셋째 대도시권 이외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 (1) 살인과 절도사건의 특징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은 발생 자체가 드물었고 대개 미군에 의한 사건이었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동일 국적의 외국인 상호간에 이권을 둘러싼 분쟁의 형태이며 둘째,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감정상의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생활 중 범죄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중국,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칼 등 흉기를 소지할 수 있다.
- ② 범행 동기가 매우 충동적이며 우발적이다. 특히 금품관련의 경우 매우 적은 금액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자국민끼리 범죄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
- ④ 범행 직후 연고감, 지리감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잠적 또는 타인 명의로 행

---

22) 김 준,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대책”, 현안분석, 제101호, 1995, p. 53.

23)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32.

세한다.

⑤ 국내 수사기법(통신수사 등) 노출로 증거인멸 및 언어소통 문제에 따라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sup>24)</sup>

절도범죄는 외국인이 ‘생활하는 중에 일으키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에 의한 절도범죄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2인 이상의 공범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이다. 공범 중 한 사람은 망을 보며 차에 대기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한 후 나머지 사람이 금품을 절취하는 것이다.

둘째, 절도를 하기 위해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절도범들은 대개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한국 국민의 태도를 이용하여 환전을 요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혼란시킨 후에 금품을 절취한다. 절도범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금은방, 상품 판매점과 같이 현금거래가 많거나 고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징

외국인이 ‘생활 중에 일으키는 범죄’ 가운데 절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폭행 및 상해범죄이다. 폭행 및 상해는 2004년 모두 573건으로 ‘생활 중에 일으키는 범죄’ 1,201건의 48%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폭행 및 상해사건의 특징은 첫째, 살인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의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반면, 폭행 및 상해사건에서는 내국인이 피

---

24) 김광효, “강제퇴거의 현실태와 문제점”, 법무연구, 제19호, 1992, pp. 89-90.

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둘째, 살인이나 절도사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감정문제나 금전상의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만취상태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폭행 및 살인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초로 하여 폭행 및 상해사건의 유형을 범죄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① 작업장 내에서의 감정 문제, ② 금전적 갈등, ③ 음주상태에서의 시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다.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이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며, 일부 범죄는 국내의 범죄조직과 외국의 범죄조직이 연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모의 범죄 특성을 갖기도 한다.<sup>25)</sup>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를 해당 범죄의 특징에 따라 ① 전문범죄집단 범죄, ② 마약, 보석밀수, ③ 매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6)</sup>

##### (1) 전문적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

외국의 범죄조직과 국내의 범죄 조직 간의 연계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불법취업 알선과 관련된 불법취업브로커 조직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범죄조직이 국내의 범죄조직일 경우 불법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외국의 범죄조직과 국내의 범죄조직이 연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조직이 외국의 범죄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는 외국의 범죄조직이 국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규모의 범죄조직임을 알 수 있다.

---

25) 신진규, 전계서, p. 120.

26) 심영희, 「비판범죄론」(서울: 범문사, 1987), p. 321.

이 외에 외국인의 직업적인 범죄집단으로는 관광을 겸하여 입국하여 절도로 생활비와 관광여비를 충당하는 절도조직을 들 수 있다. 전문적으로 절도에 의존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조달하는 범죄 집단이 해외에 거점을 갖고 있는 조직력이 강한 범죄집단의 일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범죄를 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범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 (2) 밀수

최근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추세를 살펴보면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헤로인, 코카인 등 외국산 마약류의 압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사건은 내국인만 검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마약 밀매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밀반출하려던 사건 역시 국내에 마약류가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 증가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의 증가현상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범죄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에 의한 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를 보여주는 범죄로는 보석밀수를 들 수 있다.<sup>28)</sup>

이런 보석밀수 사건은 서울 등 대도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자신의 회사의 상호로 다이아몬드나 자수정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일부는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종로일대나 귀금속 단지에 몰래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경기가 불안하여 금이나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발생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기타 범죄

27) 김인숙, “외국인범죄와 처우에 관한 연구”,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2000, p. 82.

28) 유병화, 「국제법총론」(서울: 일조각, 1985), pp. 125-127.

앞으로 심각성이 우려되는 범죄유형으로는 매춘범죄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범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의한 매춘범죄가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sup>29)</sup>

### 3)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표 2-4>는 외국인범죄 피의자 단속현황이다.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검거건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 순으로 보면 지능범, 폭력, 절도의 순이었다. 2004년 대비 지능범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1999년을 기준으로 2005년의 수치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4> 외국인범죄 단속 현황

(단위: 명)

유형별 연도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지능범	기타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1998	2,300	12	64	14	263	623	262	1,062	439	1,861
1999	3,012	22	86	11	305	870	445	1,273	620	2,392
2000	3,438	18	58	17	444	1,174	449	1,278	660	2,778
2001	4,328	40	113	34	590	1,380	589	1,582	883	3,445
2002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001	881	4,340
2003	6,144	32	137	49	630	2,071	834	2,391	1,134	5,010
2004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3,620	1,800	7,303
2005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2,734	2,169	6,873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6), p. 329.

29) 손동권·김한균, “출입국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6, p. 15.

국내 체류 외국인범죄가 크게 늘면서 그 양상도 전문화되고 있다.<sup>30)</sup> 2006년 4월 법무부 출입국 기획수사팀에 의해 검거된 말레이시아 신용카드 위조범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붙잡힌 말레이시아인 신용카드 위조단은 모두 23명에 달했다. 이들은 외국신용카드 498장을 위조, 동대문시장 등에서 40억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을 사들인 뒤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8명의 태국인 상습도박단도 2006년 6월 적발됐다. 이들은 경기 양주시 폐공장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놓고 매주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이 급습한 현장에서는 원화 600만원을 비롯해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국적이 다른 돈들이 쏟아져 나왔다. 2006년 5월에는 위장결혼을 위해 40여명의 중국여성이 집단 합숙하는 현장도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은 2006년 4월부터 110명 규모의 외국인 기획수사 전담반을 출범시키고 외국인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알선 브로커,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전담반은 3개월 만에 860명의 출입국사범을 검거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전체 출입국사범은 29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취업시키는 유흥업소 적발은 4~6월 24건에 달했다. 위장결혼 적발도 2005년 전체 1건에 머물렀으나 전담반은 3개월 동안 13건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정부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주한민군지위협정(SOFA)」을 1991년 2월 1일에 1차 개정, 2001년 1월 18일에 2차 개정하였다.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SOFA사범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소폭 상승하여 모두 200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단속하였다.

---

30) 문화일보, 2006. 08. 21, p. 18.



<표 2-5> SOFA(미군 등)범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60	182	236	207	223	220	195	175	200
살 인	-	1	1	1	-	-	1	1	-
강 도	1	9	19	9	4	5	10	7	2
강 간		2	1	-	1	-	1	4	6
절 도	22	38	31	47	44	57	43	26	40
폭 력	124	121	161	118	122	146	121	116	120
지능범	2	3	4	4	6	2	2	15	9
기 타	11	8	19	28	46	10	17	6	23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6), p. 428.

통역센터 활용 실적을 보면 수사 관련 1,283건, 민원관련 4,017건, 기타 4,025건에 달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사관련 통역수요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야간 사건,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표 2-6> 통역센터 활용 실적

(단위: 명)

계	수 사			민 원			외국 인사 방문	번역, 기타 통역
	피의자 검거 조사	피해자 신고 접수	사건 경위 조사	제증명 발급	이산 가족 찾기	민원 기타		
9,420	735	236	312	3,551	38	428	95	4,025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30.

2005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해상 밀입국자수는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3명으로 러시아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인(조선족 102명, 한족 20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밀입국이 많은 이유는 ‘코리안 드림’을 가진 중국인 다수가 한국입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조선족에 대한 중국당국의 여권 발급제한 및 우리나라의 입국심사강화 등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밀입국 알선비용을 국내취업 후에 상환토록 하는 후불제 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7>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480	991	647	1,781	1,033	260	292	130	123
중국인	조선족	1,061	585	518	1,428	930	207	179	108	102
	한 족	417	392	127	156	97	53	113	22	20
파키스탄		2	7	-	1	-	-	-	-	-
방글라데시		-	1	-	172	-	-	-	-	-
베 트 남		-	1	-	5	-	-	-	-	-
기 타		-	5	2	19	6	-	-	-	1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6), p. 429.

<표 2-8>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 1998년에 5,991건의 단속이 실시되었으나 이후 5년 동안 단속이 감소추세이고 2004년은 1998년의 10%에도 미치지 않은 516건만을 단속하였다. 이런 단속실적의 저하는 곧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외국인범죄증가와도 관련

되는 사안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단속현황	5,991	3,392	1,356	1,180	1,719	516
전년대비(%)	.	-43.4	-60.0	-13.0	+ 45.7	-70.0
지수증감율	100	56.6	22.6	19.7	28.6	8.6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5), p. 315

## 제3장 외국인범죄 수사의 문제점과 실증분석

외국인 취업자의 증가는 불법 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각종 범죄, 에이즈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이 다양화될수록 문화적 충돌이나 세력다툼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범죄수사를 위한 통역인 지정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sup>31)</sup>

외국인범죄는 서울·경인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수사문제는 외국인의 동태 파악에 의한 정보수집과 이를 근거로 한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 제1절 외국인범죄 수사의 문제점

#### 1.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문성 부족

##### 1)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경찰청의 외사과와 형사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외사과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형사과와 중복되는 점이 많은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의 경우는 외국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외사과, 형사과 모두 취급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과 수사역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

31) 양문승·이기호,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실태와 관리방안”, 치안연구소, 1996, p. 77.

따라 외사수사요원은 상표법 위반이나 원산지 미표시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수사만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수사2계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외사수사의 존재 자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은 전체 범죄 중에서 외사사범이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외사과가 일반 형사과와 대등한 조직 및 인원을 보유하고 모든 외사사범을 독자 처리하고 있다.

## 2)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보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라는 특유의 강한 권리의식, 타국에서 구속당하여 재판을 받는 불안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생각, 자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을 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국제적인 조직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자백하였을 때 귀국 후나 자국에 남아 있는 가족에의 보복의 두려움 등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를 할 때 이익유도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법정형과 형사사법절차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는 것도 피의자로 하여금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 3) 언어·문화의 차이 및 통역의 문제점

언어소통문제는 비록 수사뿐 아니라 재판, 행형에도 수반되는 문제로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술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기 쉽다.

수사기관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통역비 지급과 통역요원들의 내실화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수사관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 경찰의 통역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 법원과 달리 경찰의 사건, 사고는 주로 심야에 발생하므로 현재의 통역비를 받기 위해 심야 통역을 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 통역비 지연 지급이다. 통역예산을 지방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어, 통역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역 후 비용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의 통역을 회피하게 된다.

셋째, 낮은 통역비로 민간인 통역 기피현상이다. 타 기관(검찰청, 법원 등)과 비교, 경찰관서의 통역 수당이 비교적 적게 산정되어 있어 통역을 기피하므로 현실적인 통역비 산정 기준의 인상이 요구된다.

넷째, 수사, 교통 등 외국인 관련 조사시 통역비 지급 인식 부족이다. 대개 지방경찰청에 배정된 전체 통·번역비의 20~30%만이 사용되는데 이는 일선 수사관들이 일반 수사나 교통 부서에서 외국인 관련 조사 시 일정액의 통역비가 지급됨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외국인을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할 경우 통역인을 대동하기 곤란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의자 체포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체포된 피의자에게 해당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미란다 고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피의자가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수사시에는 피의자 등에 대한 언어소통 문제로 인하여 진술

과 심문에 의한 증거확보나 참고 자료수집이 곤란하고 또한 통역 수사시 통역인이 수사용어 및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통역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전문 통역인을 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국내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외하고는 해당 언어권 통역인이 충분하지 않아 통역인이 도착할 때까지 장시간 조사를 지체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수 언어권의 경우에는 해당국 대사관원이나 체류자를 이용하여 통역하도록 하는데 이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2.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 필요

사건관계자가 외국인일 경우 증거 및 정보의 수집, 여권의 지위확인, 피의자 인정사항의 확인, 전과확인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외국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의 법제도, 수사기관의 조직, 수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내용적으로 제약이 따르므로 내국인의 수사와 같이 신속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외국수사기관과 원활히 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외국인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수사만으로는 완결할 수가 없어 증거 및 정보수집, 국외도주 피의자의 소재확인 등에 있어서 외국 수사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피의자가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특히 외국의 직업적 범죄자집단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강하여 신병확보

가 매우 어려운 사례가 많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의 신병인도에 관하여 각국의 법제가 달라 일단 국외로 도주한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의 수사기관이 확보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자가 외국인인 경우 모국에서 범죄경력, 여권의 진위 여부, 인적사항 등 정보의 입수에 관하여는 관계국의 인터폴이나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의뢰하여야 하므로 시간적으로나 내용에 제한을 많이 받아 국내에서와 같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없다. 또한 신원조치를 의뢰하더라도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조차 없는 국가가 있어 명확한 생년월일 등이 입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문제점

#### 1) 입국사증 부정발급 및 위조 여권

입국사증 부정발급은 입국하기 전부터 범죄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범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중한국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한 중국동포가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며, 2001년 2월까지 홍콩 총영사관에서 한국방문 비자가 139명의 재중동포들에게 현지 한국인 브로커의 뇌물로 인해 발급된 사례가 있다.

#### 2) 불법 체류자 관리상의 문제점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신원파악의 주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는 기능직까지 합쳐 1,000여명 정도가



방대한 양의 출입국관리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어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로 파악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출입국 및 국내체류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국,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약 10여 개에 달하는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나 관련 업무의 공백현상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경찰의 부담이 늘고 있다.

출입국 관리체계는 미국형과 유럽형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미국형은 국경 및 해·공항에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결정, 부여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입국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련 업무는 법무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유형이다. 미국에서는 출입국업무 및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를 전적으로 이민국이 담당하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유럽형에서는 출입국 자체는 간편히 하고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형태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당해 업무를 내무부에서 관장하나 실제로는 통일 경찰 기관에 의하여 관리한다.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내무부장관 산하의 국가경찰총국장 산하에 「외국인 규제 및 불법노동대책국」이라는 전담 부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두 가지의 관리체계 중 하나를 택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유럽형의 관리체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논거로서는 첫째,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와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이 경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유럽형의 관리체계를 취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 요소도 제거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도모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체류자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국적 조직망이 있고, 현장에서 그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대기업의 대량감원 등으로 실업자가 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값싼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노동력 유입은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증가는 국내 고용시장을 교란시키고 현재도 이미 심각한 고용시장의 2중 구조화를 고착시키게 되며,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범람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 어려워지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은 교육·주택·사회보장·노동자의 권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생활비가 떨어진 불법 체류자들은 빈민가 형성 및 여러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난점의 해결책으로 정부당국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으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된 연수사업장을 탈출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으며 연수기간이 끝났을 때 모두 귀국한다는 보장도 없어 불법 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득이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임기응변식 대책수립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기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허용된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즉, 체류기간이 끝났으므로 무조건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면 체류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일정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본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법을 어긴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모두 귀국시키는 것이 법의 권위를 지키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권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임금체불, 폭력, 산업 재해, 질병 등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범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의 차이를 상호간에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행사나 모임이 필요하다.

### 3) 출국금지 관련 문제점

최근 발생한 프랑스인 영아사체 유기사건에서 핵심 관계자의 출국을 막지 못한 이유는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 규칙」 때문이었다.<sup>32)</sup>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국민과 외국인 모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업무처리규칙도 우리 국민에 대해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는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32) 내일신문, 2006. 08. 02, p. 21.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령 제585호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외국인 출국정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국인범죄를 방조할 수도 있는 출국정지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4. 협력 수사의 필요 및 수사 부담의 가중

##### 1) 피의자의 신원·소재확인의 어려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 중 91일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의무가 있고 1년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문 등록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조회로 입·출국사항을 확인하거나 체류지의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외국인등록사항을 조회하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관광객 등 단기 체류외국인은 입국시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국신고서의 기록에 의해서만 신원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확인방법이 없다.

또한 외국인은 신상관계를 증명하는 여권의 소지, 휴대가 의무사항이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불법체류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여권을 은닉, 파기하는 사례가 있다. 또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조여권, 위명여권, 타인명의여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찰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여권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칭하는 이름과 연령을 기재할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하기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검찰에 송치할 단계에서도 아직 여권을 입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송치서에 반드시 피의자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을 추적, 탐문하거나 십지지문을 채취하여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신원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역시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조회기일도 많이 소요되어 수사상 애로가 많으며 여권발급 수속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된 여권에는 위조되거나 타인명의로 취득한 것도 있어서 피의자의 신원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거나 피해신고만 하고 출국할 경우,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up>33)</sup>

여행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공항 수속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는 점도 외국인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티켓 이용자는 예약번호나 신분증만 있으면 여권만으로 탑승 수속이 가능해졌고 2005년 11월부터 내국인 입국신고서가 폐지되어 출입국 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졌다. 또한 2006년 8월 1일부터는 출국신고서까지 폐지되어 여권 하나로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게 되었다.<sup>34)</sup>

2004년부터 도입된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은 출입국 심사 때 여권을 제출하면

---

33) 경찰대학, 「경찰외사론」(용인: 경찰대학, 1999), pp. 120-122.

34)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김포공항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신고서 폐지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그 결과 출국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6. 08. 21, p. 24.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이 여행자 출입국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대상자 여권을 여권자동판독시스템 단말기에 접촉하면 해당자의 인적 사항이 곧바로 확인되어 출입국 규제자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해당자의 출입국기록과 여권 사진이 영상기록으로 자동 저장되는 것이다.

이는 출입국심사가 수동으로 처리될 때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권의 위조와 변조를 막아 출입국심사 업무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출입국 신고서 폐지는 내국인과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시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해 미등록 외국인들의 경우, 입국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신고서 폐지는 탑승객과 공항 관계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출입국 통계자료 구축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출입국자 직업 항목 집계가 불가능해지고 여권자동판독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방문 목적지는 항공예약 내역상 첫 도착지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의 불법체류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차원의 신원확보조치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웃의 한국인들과 접촉을 피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을 구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수반된다.<sup>35)</sup>

---

35) 법원행정처, 「사범연감」(서울: 법원행정처, 2003), pp. 53-55.

## 2) 외국인 참고인의 소재 확인 또는 신병확보의 곤란

외국인범죄는 피의자 이외의 외국인이 참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그 참고인이 불법체류, 체류자격 외 활동 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각을 면하기 위하여 사건발생 즉시 체류장소를 옮겨버리거나 도주해 버린다. 심지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사건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매춘여성을 데리고 잠적해 버린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들 참고인은 가능한 한 빨리 소재를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빨리 소환하여 조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한 뒤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그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청구를 한 경우 변호인이 그 참고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증인신문을 방해 또는 침해할 목적으로 진술자를 국외로 보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외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36)</sup>

## 제2절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실증조사

### 1. 조사 설계

#### 1) 조사목적

외국인범죄는 서울·경인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

---

36) 법원행정처, 「사범연감」(서울: 법원행정처, 2003), p. 44.

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의의와 실태를 살펴보고, 일선에서 외국인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외국인범죄 관련 선행 연구와 정부·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구성 내용은 <표 3-1>과 같다. 외국인범죄 관련 일반사항과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구통계학적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변수	항목	문항 수
외국인범죄 관련 일반사항	외국인범죄의 현재의 심각성 정도, 앞으로의 증가 가능성, 경찰의 대응능력, 수사관련 교육 횟수, 교육명과 교육효과, 수사교육 내용 등	7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문제점	외국인범죄의 원인, 수사활동의 문제점, 외국인 관리상의 문제점, 수사전문화 정도, 전문화 부족 원인, 통역의 문제점, 활용 통역원, 수사관련 제도 및 환경의 문제점, 경찰 내부 문제점 등	9
외국인범죄 수사 개선방안	수사 개선방안, 외사경찰 개편 방법, 개선방안 기술 등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계급, 총 경찰 경력, 수사·형사경력, 근무지	5
계		24



### 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서울·경기 지역의 경찰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경찰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6년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27일이 소요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각 경찰서 및 경찰청으로 보내고,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경찰관들에게 배포 후,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여 16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50부를 분석하였다.

###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이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외국인범죄 관련 문항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 교차분석을 하였다.

## 2. 분석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먼저 연령에서는 '40-49세'가 72명(4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39세'가 70명(46.7%)으로 나타나 대부분 30대, 40대가 주로 응답하였다. 계급은 '경위'가 60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사'가 46명(30.7%)으로 나타났다. 총 경찰경력에서는 '11-15년'이 70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 ‘16-20년’이 40명(26.7%)으로 나타났다. 부서별 근무경력으로서 수사·형사경력의 경우, ‘6-10년’이 90명(60.0%)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근무지는 ‘경찰서’가 96명(64.0%)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경찰청’이 54명(36.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군은 경찰 계급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경위가 평균 11.8%보다 훨씬 많은 40.0%였으며 경사도 경찰평균 20.7%보다 높은 30.7%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찰경력이 짧은 경장의 경우, 평균 30.5%보다 낮은 16%였으며 경찰 계급 평균 상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순경 계급은 없었다. 이것은 수사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본 설문 특성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응답자구성은 경찰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력과 계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2> 경찰 계급 인원과 구성비

(단위 : 명, %)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계
29,932	29,111	19,760	11,314	3,326	1,411	423	34	20	4	1	95,336명
31.3	30.5	20.7	11.8	3.4	1.4	0.44	0.03	0.02			100%

자료: 경찰청,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06), p. 452.

<표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연령	30-39세	70	46.7
	40-49세	72	48.0
	50세 이상	8	5.3
계급	경장	24	16.0
	경사	46	30.7
	경위	60	40.0
	경감	20	13.3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4	2.7
	6-10년	28	18.7
	11-15년	70	46.7
	16-20년	40	26.7
	21년 이상	8	5.3
수사, 형사경력	5년 이하	32	21.3
	6-10년	90	60.0
	11-15년	22	14.7
	16-20년	6	4.0
근무지	경찰서	96	64.0
	지방경찰청	54	36.0

## 2) 외국인범죄 관련 일반 사항

### (1) 외국인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 능력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범죄의 심각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8로 나타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 증가 가능성은 평균 4.65로 증가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능력은 평균 2.05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설문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인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5점 만점의 평균인 3점보다도 훨씬 높은 4.48이라는 결과는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의 정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경찰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 의 특성상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오히려 대응능력은 평균점인 3점보다도 훨씬 낮은 2.05로 드러나 심각성과 우려를 보다 더 증폭시키고 있다.

<표 3-4> 외국인범죄의 심각성 정도와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 능력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외국인범죄의 심각성 정도	심각하지 않다	2	1.3
	보통 이다	4	2.7
	심각하다	64	42.7
	매우 심각하다	80	53.3
	평균		4.48
외국인범죄 증가 가능성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	1.3
	약간 증가할 것이다	48	32.0
	매우 증가할 것이다	100	66.7
	평균		4.65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	매우 부족하다	62	41.3
	부족하다	24	16.0
	보통이다	58	38.7
	양호하다	6	4.0
	평균		2.05

## (2) 수사관련 교육 실태

수사관련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먼저, 교육 횟수에서는 ‘1회’인 경우가 70명(4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경우도 22명(14.7%)나 되어 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본 설문의 대상이 경찰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볼 때 교육을 받을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실제 교육 빈도는 매우 낮

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수사·형사경력에의 경우, 6-10년이 60.0%이고 11년 이상이 18.7%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율은 1회 46.7%이고 전혀 받지 않은 응답자도 16.7%에 달해 모두 61.4%가 1회 이하의 수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무 기간에 비해 수사 교육을 받은 횟수가 너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업무의 과중, 부서 분위기상 교육을 가기 힘든 환경, 경찰서장·과장 등 관리자의 의지부족,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 즉 업무 누적, 인사고과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수사 교육시설 혹은 교육 장소, 시스템 등 교육 환경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거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세부 원인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효과로는 응답자율인 24% 중 좋다고 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1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보통이 6.7%, 없음이 2.7%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관련 중요 수사교육내용은 ‘외국인범죄수법’이 7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련기관 협조 및 절차’가 34명(22.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경찰의 외국인 수사교육내용의 경우, 실무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범죄 수법과 관련기관 협조 및 절차 등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5> 수사관련 교육 실태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교육 횟수	4회 이상	4	2.7
	3회	12	8.0
	2회	42	28.0
	1회	70	46.7
	없음	22	14.7
교육효과	없음	4	2.7
	보통	10	6.7
	좋음	22	14.7
	무응답	114	76.0
외국인범죄 관련 중요 수사교육 내용	외국인 신원파악 요령	20	13.3
	관련기관 협조 및 절차	34	22.7
	기본범죄 수사요령	4	2.7
	외국어 교육	22	14.7
	외국인범죄 수법	70	46.7

### (3)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문제점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기변동, 빈곤 등의 경제적 원인’이 88명(5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문화갈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화적 원인’이 50명(33.3%)으로 나타났다. 개인 환경적 원인은 12명(8.0%)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 빈곤 등의 경제적 원인’이 가장 높은 외국인범죄의 원인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 내 실정에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많은 비용을 들여 입국한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므로 원했던 대로 돈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이다.

셋째, 불법 체류시 강제추방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계획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갈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화적 원인’이 두 번째 외국인범죄의 원인인 것은 외국인 차별에 따른 복수심이나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해소의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권침해방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범죄 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 확보의 문제점’이 108명(7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이 30명(20.0%)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범죄 수사시 가장 어려운 점은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확보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수사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장기간 수사로 흐르기 때문이다.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은 예상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으나 이 역시 내국인 수사에서는 겪을 수 없는 어려움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범죄 관련 외국인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불법 체류자 증가를 못 막는 관리체계’가 114명(7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관리체계의 다원화’가 20명(13.3%)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불법체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한국 내 범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준범의식을 약화시킨다.

둘째, 합법 체류자에 비해 소재파악이 힘들어지고 자주 근무지를 옮기게 됨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인의 신원확인 및 신병확보를 매우 힘들게 한다.

셋째, 불법 체류자 자신이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근로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문화갈등, 인권침해에 따른 반발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

<표 3-6>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문제점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	직업, 연령 등의 개인 환경적 원인	12	8.0
	경기변동, 빈곤 등의 경제적 원인	88	58.7
	문화갈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화적 원인	50	33.3
외국인범죄 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언어 및 문화의 장벽	30	20.0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확보의 문제점	108	72.0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	4	2.7
	외사와 형사의 업무관계	2	1.3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 공조	6	4.0
외국인범죄 관련 외국인 관리상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부족	16	10.7
	불법 체류자 증가를 못 막는 관리체계	114	76.0
	관리체계의 다원화	20	13.3

#### (4)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정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명(66.7%)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가 40명(26.7%)으로 나타나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문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음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수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수사교육을 받을 시간적, 현실적 여유가 없으므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화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수사의 업무 과중’이 44명(2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예산부족’이 40명(26.7%)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교육의 미흡’도 36명(24.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여유 인력을 확보한 다음, 이들을 계속 재교육시키고 교육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하는 학습 조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표 3-7>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외국인범죄 수사 전문화 정도	매우 전문화되지 못하였다	2	1.3
	전문화되지 못하였다	40	26.7
	보통이다	100	66.7
	전문화되었다	8	5.3
전문화 부족 원인	지휘관의 관심 부족	4	2.7
	외국어와 수사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부족	26	17.3
	전문교육의 미흡	36	24.0
	예산 부족	40	26.7
	수사의 업무과중	44	29.3

#### (5)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으로는 ‘야간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라고 한 경우가 42명(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통역비 지급기준이 낮음’이 40명(26.7%)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역 예산 부족’이 36명(24.0%)으로 나타났다.

수사 시 수사관이 직접 해당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

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통역을 활용해야 하는데 야간일 때는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24시간 통역대기센터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수사관의 외국어 능력향상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통역시 활용하는 통역원으로는 ‘경찰서 지정 통역원’이 72명(48.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서 외사요원’이 48명(32.0%)이었다.

외국인범죄 수사시 통역은 다른 통역보다도 형사법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국제간 외교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도의 용역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통역비 지급이 필요하며 실제, 공식적으로 통역비 지급이 가능한 경찰서 지정 통역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경찰의 통역비가 낮은 수준이므로 통역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규모를 늘리고 통역비 지급기준을 높여 외국인범죄 수사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외사요원을 주축으로 수사경찰관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 3-8>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	야간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	42	28.0
	통역 예산부족	36	24.0
	통역자의 통역능력(수사용어)부족	16	10.7
	통역비 지급기준이 낮음	40	26.7
	통역자의 통역기피	4	2.7
	소수언어 통역자 확보	12	8.0
수사 시 활용하는 통역원	경찰서외사요원	48	32.0
	경찰서 지정 통역원	72	48.0
	주변의 통역 가능 경찰관	14	9.3
	관내 지인	14	9.3
	기타	2	1.3

(6)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제도 및 환경 문제점과 경찰 내부 문제점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제도 및 환경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국사증 부정발급’이 52명(3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여권의 위·변조’가 50명(33.3%)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중한국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며 중국동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으며<sup>37)</sup> 2001년 2월까지 홍콩 총영사관에서 139명의 재중동포들에게 한국방문 비자가, 현지 한국인 브로커의 뇌물로 인해 발급된 사례가 있다. 2004년 6월, 상하이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해당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 불법 체류함에 따라 담당자가 견책조치를 받은 바 있다.<sup>38)</sup>

37) 서울신문, 2004. 08. 18, p. 10.

외국인범죄 관련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이 54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수사인력의 부족’이 44명(29.3%), ‘수사예산의 부족’이 36명(24.0%)으로 나타났다.

<표 3-9>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제도 및 환경 문제점과 경찰 내부 문제점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관련 제도 및 환경 문제점	90일 이상 거주외국인 신원, 동태 파악	48	32.0
	여권의 위·변조	50	33.3
	입국사증 부정발급	52	34.7
경찰 내부의 문제점	기본 수사 능력 부족	2	1.3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	54	36.0
	수사 인력의 부족	44	29.3
	수사 예산의 부족	36	24.0
	수사 장비의 현대화	2	1.3
	경찰서간 수사 공조	2	1.3
	통역 지원	10	6.7

#### (7)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에서는 ‘외사경찰 조직 구조개편’이 54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수사 장비의 현대화’가 50명(33.3%)으로 나타났다. 외사경찰 개편 방법으로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국내 수사경찰과 외사경찰의 수사범위를 구분하여 범죄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가 122명(81.3%)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외국인범죄 전부를 외사계에서 전담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범일 경우 내국인과 같은 형사범으로 취급하여 형사계, 조사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의 특성이 무시되고 외사계의 조직 규모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사계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

38) 세계일보, 2004. 12. 27, p. 18.

정 규모의 일반 외국인 형사범수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10>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N=150(100%)

변수	항목	빈도(N)	비율(%)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통역지원 체제의 개편	8	5.3
	외사경찰 조직 구조 개편	54	36.0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간의 상설협의 기구	4	2.7
	외국인의 신원확대 대책	20	13.3
	수사장비의 현대화	50	33.3
	수사예산, 인력, 장비 등 지원	12	8.0
	수사교육의 개선	2	1.3
외사경찰 개편 방법	현재 외사경찰의 수사체제에 수사 인력과 장비만 보강한다	2	1.3
	수사·형사과에서 외국인 수사를 전담하고 통역 등만 외사에서 지원한다	26	17.3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국내 수사경찰과 외사경찰의 수사범위를 구분하여 범죄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22	81.3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 관련 사항 차이

### (1) 외국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으며, 연령, 총 경찰경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39세’인 경우가 평균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이 평균 4.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외국인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5$ ).

총 경찰경력에서는 ‘5년 이하’인 경우가 평균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년 이상’인 경우가 평균 4.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1$ ).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11-20년 경력의 경찰관들이 그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잘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 차이

변수	항목	빈도(N)	M	S.D	T/F
연령	30-39세	70	4.57	.693	3.372*
	40-49세	72	4.44	.554	
	50세 이상	8	4.00	.000	
계급	경장	24	4.42	.881	1.730
	경사	46	4.65	.566	
	경위	60	4.40	.558	
	경감	20	4.40	.503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4	5.00	.000	3.470**
	6-10년	28	4.29	.897	
	11-15년	70	4.60	.549	
	16-20년	40	4.45	.504	
	21년 이상	8	4.00	.000	
수사 · 형사 경력	5년 이하	32	4.31	.859	1.354
	6-10년	90	4.56	.543	
	11-15년	22	4.45	.510	
	16-20년	6	4.33	.516	
근무지	경찰서	96	4.52	.615	1.067
	지방경찰청	54	4.41	.630	

\* $p<.05$ , \*\* $p<.01$ , \*\*\* $p<.001$

## (2) 외국인범죄의 증가 가능성 정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의 증가가능성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2>과 같으며, 연령, 계급, 총 경찰경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수사 · 형사경력, 근무지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39'세인 경우가 평균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인 경우가 평균 4.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 < .001$ ).

계급에서는 '경사'인 경우가 평균 4.83으로 증가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감'인 경우가 평균 4.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 < .05$ ).

총 경찰경력에서는 '5년 이하'인 경우가 평균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1년 이상'인 경우가 평균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 < .05$ ).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의 차이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데, 실무담당여부, 관리자와 실무자의 인식 차이와 같은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경찰경력이 짧고 30대인 경사 계급 군이 외국인범죄의 증가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것을 생각되며 관리자급인 경감계급의 경우, 증가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범죄의 증가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책의 수립수준, 정도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급 간 인식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장 핵심 관리자급인 경감 급의 인식이 제일 낮은 것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면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계급 간, 연령 간 인식의 격차가 해소된다면 외국인범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넓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외국인범죄의 증가 가능성 정도 차이

변수	항목	빈도(N)	M	S.D	T/F
연령	30-39세	70	4.77	.487	9.929***
	40-49세	72	4.61	.491	
	50세 이상	8	4.00	.000	
계급	경장	24	4.67	.637	3.135*
	경사	46	4.83	.383	
	경위	60	4.57	.500	
	경감	20	4.50	.513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4	5.00	.000	2.856*
	6-10년	28	4.79	.568	
	11-15년	70	4.69	.468	
	16-20년	40	4.55	.504	
	21년 이상	8	4.25	.463	
수사·형사경력	5년 이하	32	4.69	.592	1.345
	6-10년	90	4.69	.466	
	11-15년	22	4.55	.510	
	16-20년	6	4.33	.516	
근무지	경찰서	96	4.67	.516	.437
	지방경찰청	54	4.63	.487	

\*p<.05, \*\*p<.01, \*\*\*p<.001

### (3)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3>와 같으며, 연령, 계급, 근무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찰경력이나 수사·형사경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50세 이상’인 경우는 평균이 3.00으로 대응능력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30-39세’인 경우는 평균이 1.71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계급에서는 ‘경위’인 경우가 평균 2.47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경사’인 경우는 평균 1.52로 나타나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근무지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청인 경우는 평균 2.44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경찰서는 평균 1.83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이에 따라 계급상 경사와 조직 단위상 지방 경찰청보다는 경찰서 단위가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으며 경찰의 총체적 대응능력 역시 가장 저조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이들 집단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13>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 정도 차이

변수	항목	빈도(N)	M	S.D	T/F
연령	30-39세	70	1.71	.887	11.104***
	40-49세	72	2.28	.996	
	50세 이상	8	3.00	.000	
계급	경장	24	2.08	1.060	9.442***
	경사	46	1.52	.781	
	경위	60	2.47	.965	
	경감	20	2.00	.795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4	1.00	.000	1.815
	6-10년	28	1.93	.900	
	11-15년	70	2.06	1.048	
	16-20년	40	2.15	.921	
	21년 이상	8	2.50	.926	
수사·형사경력	5년 이하	32	2.13	1.008	1.070
	6-10년	90	2.09	.990	
	11-15년	22	1.73	.883	
	16-20년	6	2.33	1.033	
근무지	경찰서	96	1.83	.970	-3.925***
	지방경찰청	54	2.44	.883	

\* $p<.05$ , \*\* $p<.01$ , \*\*\* $p<.001$

#### (4) 수사 관련 교육 효과의 차이

수사관련 교육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4>과 같으며, 근무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가 경찰서인 경우가 평균 3.64로 지방경찰청 평균 3.00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1$ ).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방경찰청보다 경찰서의 교육기회가 적거나 업무부담 등이 높은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방경찰청보다는 경찰서 우선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14> 수사 관련 교육 효과의 차이

변수	항목	빈도(N)	M	S.D	T/F
연령	30-39세	14	3.57	.514	.245
	40-49세	22	3.45	.800	
계급	경장	6	3.67	.516	1.045
	경사	10	3.40	.516	
	경위	16	3.38	.885	
	경감	4	4.00	.000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2	4.00	.000	2.612
	6-10년	6	3.67	.516	
	11-15년	14	3.14	.864	
	16-20년	12	3.83	.389	
	21년 이상	2	3.00	.000	
수사 · 형사경력	5년 이하	4	4.00	.000	1.263
	6-10년	20	3.40	.821	
	11-15년	10	3.40	.516	
	16-20년	2	4.00	.000	
근무지	경찰서	28	3.64	.488	2.462**
	지방경찰청	8	3.00	1.069	

\* $p<.05$ , \*\* $p<.01$ , \*\*\* $p<.001$

(5)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5>와 같으며, 연령, 총 경찰경력, 수사, 형사경력, 근무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30-39세'와 '40-49세'인 경우는 경제적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50세 이상'은 사회문화적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총 경찰경력에서는 경력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원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경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원인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수사·형사경력에서는 10년 이하에서는 경제적 원인을, 11년 이상에서는 사회문화적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근무지에서는 경찰서에서는 경제적 원인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원인을 들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제적 원인 다음으로 개인 환경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이 동등하게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

이와 같은 결과는 관심사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높은 30, 40대는 범죄의 원인을 경제적 원인에 두고 50대 경찰관은 경제적 원인보다는 사회문화적 원인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이 하나일 수는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접근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교육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30, 40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하고 50세 이상은 표창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가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표 3-15>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 차이

구분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			계	X <sup>2</sup>
		개인 환경적 원인	경제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연령	30-39세		52 34.7%	18 12.0%	70 46.7%	33.412(a)* **
	40-49세	12 8.0%	36 24.0%	24 16.0%	72 48.0%	
	50세 이상			8 5.3%	8 5.3%	
계급	경장		18 12.0%	6 4.0%	24 16.0%	8.346(a)
	경사	4 2.7%	30 20.0%	12 8.0%	46 30.7%	
	경위	6 4.0%	28 18.7%	26 17.3%	60 40.0%	
	경감	2 1.3%	12 8.0%	6 4.0%	20 13.3%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4 2.7%		4 2.7%	34.840(a)* **
	6-10년		24 16.0%	4 2.7%	28 18.7%	
	11-15년	6 4.0%	46 30.7%	18 12.0%	70 46.7%	
	16-20년	4 2.7%	14 9.3%	22 14.7%	40 26.7%	
	21년 이상	2 1.3%		6 4.0%	8 5.3%	
수사·형사 경력	5년 이하		24 16.0%	8 5.3%	32 21.3%	24.677(a)* **
	6-10년	8 5.3%	58 38.7%	24 16.0%	90 60.0%	
	11-15년	4 2.7%	4 2.7%	14 9.3%	22 14.7%	
	16-20년		2 1.3%	4 2.7%	6 4.0%	
근무지	경찰서	4 2.7%	50 33.3%	42 28.0%	96 64.0%	15.549(a)* **
	지방경찰청	8 5.3%	38 25.3%	8 5.3%	54 36.0%	

\*p<.05, \*\*p<.01, \*\*\*p<.001

#### (6)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화 정도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화 정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6>과 같으며 총 경찰경력에 따라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경찰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가 평균 3.00으로 전문화 정도가 보통으로 나타난 반면, '6-10년'인 경우는 평균 2.21로 전문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 < .001$ ).

총 경찰경력 6-10년인 집단이 전문화가 부족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수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사전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자들만 수사·외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3-16>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화 정도 차이

변수	항목	빈도(N)	M	S.D	T/F
연령	30-39세	70	2.71	.819	1.015
	40-49세	72	2.83	.504	
	50세 이상	8	3.00	.000	
계급	경장	24	2.58	.504	2.406
	경사	46	2.74	.953	
	경위	60	2.80	.480	
	경감	20	3.10	.308	
총 경찰경력	5년 이하	4	3.00	.000	8.111***
	6-10년	28	2.21	.568	
	11-15년	70	2.97	.701	
	16-20년	40	2.85	.483	
	21년 이상	8	2.75	.463	
수사· 형사경력	5년 이하	32	2.56	.619	1.969
	6-10년	90	2.87	.690	
	11-15년	22	2.73	.631	
	16-20년	6	3.00	.000	
근무지	경찰서	96	2.75	.665	-.908
	지방경찰청	54	2.85	.656	

\* $p < .05$ , \*\* $p < .01$ , \*\*\* $p < .001$

(7) 외국인범죄관련 경찰 내부의 문제점 차이

외국인범죄관련 경찰 내부의 문제점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7>과 같으며, 연령, 계급, 총 경찰경력, 수사·형사경력, 근무지 등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서는 30-39세인 경우는 수사예산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고, 40-49세인 경우는 범종별 수사전문화의 미흡과 수사 인력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다. 50세 이상에서는 범종별 수사전문화의 미흡을 가장 높게 들었다. (유의수준  $p<.001$ ) 경험이 많은 경찰관일수록 범종별 수사전문화의 미흡을 내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내부적으로 예산 부담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범종별 수사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계급에서는 경장은 수사 인력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고, 경사는 수사예산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다. 경위와 경감은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01$ ).

총 경찰경력에서는 10년 이하는 수사 인력의 부족을, 11-15년은 수사예산의 부족을, 16년 이상은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1$ ). 이것은 연령별 분석에서와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수사·형사경력에서는 경력이 6-10년인 경우는 수사예산의 부족을, 나머지는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5$ ). 근무지에 따라서는 경찰서는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을 지방경찰청은 수사 인력의 부족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1$ ).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 근무 응답자들이 총 경찰경력이나 연령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청, 경찰서간 계급, 연령 등의 균형적인 분포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표 3-17> 외국인범죄관련 경찰 내부의 문제점 차이

구분		외국인범죄관련 경찰 내부의 문제점							계	X <sup>2</sup>
		기본 수사 능력 부족	범죄 수사 전문 화 의 미 흡	수사 인력 의 부 족	수사 예산 의 부 족	수사 장비 의 현 대 화	경찰 서 간 수 사 공 조	통역 지 원		
연령	30-39세		20 13.3%	18 12.0%	28 18.7%			4 2.7%	70 46.7%	35.761(a)***
	40-49세	2 1.3%	26 17.3%	26 17.3%	8 5.3%	2 1.3%	2 1.3%	6 4.0%	72 48.0%	
	50세 이상		8 5.3%						8 5.3%	
계급	경 장		6 4.0%	12 8.0%	4 2.7%			2 1.3%	24 16.0%	58.120(a)***
	경 사		12 8.0%	6 4.0%	24 16.0%	2 1.3%		2 1.3%	46 30.7%	
	경 위		28 18.7%	22 14.7%	4 2.7%		2 1.3%	4 2.7%	60 40.0%	
	경 감	2 1.3%	8 5.3%	4 2.7%	4 2.7%			2 1.3%	20 13.3%	
총경 찰경 력	5년 이 하		2 1.3%	2 1.3%					4 2.7%	52.176(a)**
	6-10년		8 5.3%	14 9.3%	4 2.7%			2 1.3%	28 18.7%	
	11-15년		16 10.7%	20 13.3%	28 18.7%		2 1.3%	4 2.7%	70 46.7%	
	16-20년	2 1.3%	22 14.7%	8 5.3%	4 2.7%	2 1.3%		2 1.3%	40 26.7%	
	21년 이 상		6 4.0%					2 1.3%	8 5.3%	
수 사 형 사 경 력	5년 이 하		14 9.3%	8 5.3%	10 6.7%				32 21.3%	32.173(a)*
	6-10년		26 17.3%	32 21.3%	22 14.7%	2 1.3%	2 1.3%	6 4.0%	90 60.0%	
	11-15년	2 1.3%	10 6.7%	4 2.7%	2 1.3%			4 2.7%	22 14.7%	
	16-20년		4 2.7%		2 1.3%				6 4.0%	
근 무 지	경 찰 서		40 26.7%	22 14.7%	28 18.7%			6 4.0%	96 64.0%	19.824(a)**
	지 방 경 찰 청	2 1.3%	14 9.3%	22 14.7%	8 5.3%	2 1.3%	2 1.3%	4 2.7%	54 36.0%	

\*p<.05, \*\*p<.01, \*\*\*p<.001

(8)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차이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8>와 같으며, 연령, 계급, 총 경찰경력, 수사·형사경력, 근무지 등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서는 30-39세인 경우는 수사장비의 현대화를 가장 높게 들었고, 40세 이상에서는 외사경찰 조직구조개편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1$ ). 이것은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경찰의 내부의 문제점 차이와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계급에서, 경사의 경우는 수사장비의 현대화를 가장 높게 들었으며, 나머지는 외사경찰 조직 구조 개편을 가장 높게 들었다( $p<.01$ ). 수사예산, 인력 그리고 수사교육의 개선은 응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수사장비의 현대화와 외사경찰 조직구조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총 경찰경력에서는 경력이 6-10년인 경우는 외국인 신원확인 대책을, 11-15년인 경우는 수사 장비의 현대화를, 나머지는 외사경찰 조직구조개편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01$ ).

수사·형사경력에서는 5년 이하는 외국인의 신원확대 대책을, 6-10년인 경우는 수사장비의 현대화를, 나머지는 외사경찰 조직의 구조개편을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01$ ). 이것은 총 경찰경력과 매우 유사하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경찰서는 외사경찰 조직구조개편을, 지방경찰청은 외사경찰 조직구조개편과 외국인의 신원확대 대책, 수사장비의 현대화를 가장 높게 들었다(유의수준  $p<.01$ ).



<표 3-18>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차이

구분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							계	X <sup>2</sup>
		통역지 원체의 개편	외사 경찰 조직 구조 개편	관계기 관간의 상설협 의기구	외국인 의 신원확 대대책	수사 장비의 현대화	수사 예산, 인력, 장비 등 지원	수사 교육의 개선		
연령	30-39세	4 2.7%	14 9.3%	2 1.3%	12 8.0%	30 20.0%	6 4.0%	2 1.3%	70 46.7%	26.482(a)**
	40-49세	4 2.7%	32 21.3%	2 1.3%	8 5.3%	20 13.3%	6 4.0%		72 48.0%	
	50세 이상		8 5.3%						8 5.3%	
계급	경장	2 1.3%	8 5.3%		6 4.0%	4 2.7%	4 2.7%		24 16.0%	39.627(a)**
	경사		10 6.7%	2 1.3%	6 4.0%	24 16.0%	2 1.3%	2 1.3%	46 30.7%	
	경위	6 4.0%	28 18.7%		8 5.3%	14 9.3%	4 2.7%		60 40.0%	
	경감		8 5.3%	2 1.3%		8 5.3%	2 1.3%		20 13.3%	
총 경찰 경력	5년 이하		2 1.3%				2 1.3%		4 2.7%	86.081(a)***
	6-10년	2 1.3%	4 2.7%	2 1.3%	10 6.7%	8 5.3%		2 1.3%	28 18.7%	
	11-15년	6 4.0%	14 9.3%		10 6.7%	34 22.7%	6 4.0%		70 46.7%	
	16-20년		26 17.3%	2 1.3%		8 5.3%	4 2.7%		40 26.7%	
	21년 이상		8 5.3%						8 5.3%	
수사· 형사 경력	5년 이하		8 5.3%		10 6.7%	6 4.0%	8 5.3%		32 21.3%	55.770(a)***
	6-10년	8 5.3%	28 18.7%	2 1.3%	10 6.7%	38 25.3%	2 1.3%	2 1.3%	90 60.0%	
	11-15년		12 8.0%	2 1.3%		6 4.0%	2 1.3%		22 14.7%	
	16-20년		6 4.0%						6 4.0%	
근무 지	경찰서	2 1.3%	40 26.7%	2 1.3%	6 4.0%	36 24.0%	8 5.3%	2 1.3%	96 64.0%	20.586(a)**
	지방경 찰청	6 4.0%	14 9.3%	2 1.3%	14 9.3%	14 9.3%	4 2.7%		54 36.0%	

\*p<.05, \*\*p<.01, \*\*\*p<.001

## 제4장 외국인범죄수사의 개선 방안

### 제1절 외국인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 1. 수사조직의 정비와 예산지원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외국인범죄 관련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이 54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수사 인력의 부족’이 44명(29.3%), ‘수사예산의 부족’이 36명(24.0%)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를 관장하는 경찰조직은 경찰청 외사국 외사 3과이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중에는 서울과 부산지방경찰청에만 외사과를 두고 다른 지방경찰청에는 외사전담과가 없고 보안과에 두어 국내체류자의 신원 파악 및 외국인범죄를 관장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보안과내에 외사계에서 3-4명의 경찰관이 이를 다루고 있다. 외국인범죄를 지휘하여야 할 검찰조직에도 지난 1996년도 3월에야 서울지검에 외사부가 신설되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정보보고를 받아 주요 외국인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기구는 조직과 인원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한다.

외국인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외사국 외사3과가 담당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사 1과, 2과, 3과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외사 1과의 경우 사무부장이 재외국민, 외국인관련 신원조사, 국제테러관련 첩보수집 분석 및 전파를 담당하고 있고, 2과의 경우

기업체, 호텔, 시장 대상 외사첩보 수집 및 분석, 기타 외사첩보의 수집·평가·분석·기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관련 문제는 전 부서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전국 외사경찰수는 약 900여명으로 전 경찰수의 약 1%에 불과하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0개 경찰서 중에서 5개서는 외사경찰 8~14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25개서는 3~6명만을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도 심히 열악한 입장에 있다. 경찰의 하부조직은 더욱 취약하여 전국 223개 경찰서 중 70개 경찰서만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90개는 경찰서 보안과내 외사요원 1명 뿐이며, 63개 경찰서는 외사요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 수요가 많은 서울과 부산지방경찰청의 외사과를 외사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 및 관리업무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경인지역에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전국의 지방경찰청 단위에 외사과를 설치하고, 현재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의 외사계를 모두 외사과로 독립, 승격시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처럼, 범종별로 구분하여 재산범죄의 경우, 외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범죄의 경우 특히 불법 체류 자체가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내부의 관행상 외국인범죄 전부를 외사계에서 전담해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형사범으로 취급하여 형사계, 조사계에서 수사함에 따라 외국인범죄의 특성이 무시되고 외사계의 조직 규모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사계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일반형사범수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의 체제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형사범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외국인범죄의 특수성이 강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외사계가 전담하고 기타 외국인 관련 마약, 밀수 같은 범죄 역시 외사전담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확대 개편된 외사과를 중심으로 범종별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수사 장비의 현대화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2. 전문적인 수사인력의 확보와 교육

외국인범죄는 피의자와의 언어소통 문제, 외국과의 외교문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나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처우나 인권문제 등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사 및 정보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총 경찰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가 평균 3.00으로 전문화 정도가 보통으로 평가한 반면, '6-10년'인 경우는 평균 2.21로 전문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경력이 높을수록 전문화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범죄의 전문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범죄의 수사에는 수사 활동의 각종 단계에서 국제수사 공조, 협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범죄정세 등에 관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필요 불가결하며, 최근의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담 요원화, 외사분실의 수사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경찰청에 국제수사연구소를 두고 국제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경찰관 중에서 다시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지 어학연수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 등 선진국사례를 참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외사범죄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수사정예요원 전문양성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경찰수사연수소에서는 수사지휘과정(경정, 경감, 24주), 조사전문화과정(경감, 경위, 12주), 수사전문화과정(경위, 경사, 4주) 및 수사실무과정(경장, 순경, 4주)의 4개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지휘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정은 국제 또는 외사범죄 및 체류자 신원파악에 관한 교과목이 전무하며 최고위과정인 수사지휘과정에서조차도 국제형사경찰(5시간), 출입국규제요령(5시간)의 2과목, 10시간만을 강의하고 있어 현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외사국에서 국제범죄수사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 결정된 국제범죄수사과정이 1997년부터 경찰종합학교에서 1회 50명씩, 년 2회 4주 과정으로 경위이하계급을 교육시키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제범죄수사과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띤 수사 교육이니만큼 경찰수사연수소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지휘과정과 조사전문화과정에 별도의 교육시간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원파악 요령, 처리절차, 관련기관의 협조 사항, 외국인범죄의 수사 요령 등이다.

한편 외사경찰의 국외훈련은 주로 경위 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 계급에의 확산이 요망된다.

### 3. 외국어 능력 배양 및 통역 활성화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문제점으로는 ‘야간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라고 한 경우가 42명(2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통역비 지급기준이 낮음’이 40명(26.7%)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역 예산 부족’이 36명(24.0%)으로 나타났다.

수사통역시 활용하는 통역원으로는 ‘경찰서 지정 통역원’이 72명(48.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찰서 외사요원’이 48명(3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역비를 현실화하고 야간 통역의 경우, 외부통역요원활용이 곤란하므로 일반수사경찰과 외사경찰의 외국어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외국인범죄 수사담당 형사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이버교육을 통해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어능력 우수자가 외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한다.

경찰의 외국어교육은 주로 경위이하 계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의 3개 국어에 대하여 8주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 영어는 연 3회, 1회 50명씩 총 150명, 일어 연 2회, 1회 60명씩 총 120명, 중국어 연 1회, 50명이 수강하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외국인범죄의 수사에서 가장 큰 장애는 언어소통의 문제로서 수사관의 질문이 정확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전달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하게 수사관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역의 확보가 시급한 일이다. 통역인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대한 법률지식을 이해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외국어 통역인원을 모두 확보하는 데에는 예산상, 인력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통역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재단이 2006년 6월 11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전국 공통 1577-0177)’는 노-사-통역 3자가 동시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운영하다가 반응이 좋아 2006년 7월 31일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를 추가한데 이어 9월부터 러시아어를 추가하였다.

국제노동재단은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몽골, 베트남,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 2005년 외국인노동자(202명)를 대상으로 한국어 수준을 조사한 결과 29.7%가 한국어를 거의 못 알아들었고 ‘조금 한다’(63.9%)는 응답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허수’로 조사되었다.

통역 상담을 요청한 대상별로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34.4%, 고용사업주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원기관(17.9%)의 수요도 높았다.<sup>39)</sup> 노동관서는 주로 사업장 이동, 근로계약 갱신 등의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 출입국 문제로 통역지원센터

---

39) 2006년 6월11일부터 8월18일까지 2달간 실적을 보면 모두 6,725건, 1일 평균 135건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는 실제 통역요청 건수는 훨씬 많으나 통역서비스까지 지원된 건수라는 것이다. 언어별로는 몽골어 2,818건, 베트남 2,711건, 중국어 837건, 영어 25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월 현재 모두 7개 국어로 통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통역사는 언어별로 1명을 기준으로 하되 수요자가 많은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는 각 2명씩으로 현재 총 10명의 통역사가 근무 중이다. 앞으로 타갈로그어(필리핀), 싱할리스어(스리랑카) 등 모두 10개 국어로 확대하는 한편, 동시통역 제공 시간대를 야간 및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희망도 품고 있다. 레이버투데이 2006. 09. 06

를 찾았다. 이밖에 기타(20.6%)는 주로 의료기관, 은행, 우체국 등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예산을 지방경찰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어, 통역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즉시 계좌이체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타 기관(검찰청, 법원 등)과 비교, 경찰관서의 통역 수당이 비교적 적게 산정되어 있어 통역을 기피하므로 현실적인 통역비 산정 기준의 인상이 요구된다.

셋째, 수사, 교통 등 외국인 관련 조사시 통역비 지급 인식 제고이다. 지방경찰청에 배정된 전체 통·번역비조차도 전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제2절 형사사법공조와 국제경찰협력

### 1.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

국내적으로는 검찰, 출입국관리국, 경찰, 세관, 국가정보원, 노동부, 외교통상부,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인범죄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범죄에 공동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 발생 즉시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검문소와 공·항만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등에 출국로를 차단하여 외국으로 도피할 수 없도록 신속한 수사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한 외국공관 및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 등과 협조하여



범인의 신원파악과 출입국 사항 등을 파악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 기관간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국, 세관, 국가정보원,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 외국인범죄에 관련이 있는 기관의 ‘상설협의기구’를 만들고 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 외국 사법기관과의 공조

외국인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인 인도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도를 통하여 신병의 확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 등의 송달, 압수, 수색 등 증거수집,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진술청취 등 다양한 수사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 사이에만 가능한 것이지만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약이 없는 국가 간에도 가능하다.

외국인범죄 중 특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는 외국인범죄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의 정보교환과 협력강화에 힘써야 한다.

## 3. 국제경찰협력

국제화시대의 치안유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찰관들의 국제 감각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각국의 문화, 풍속, 관습에 관한 폭넓은 국제교류

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해외유학, 장기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상국과 기관, 횟수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외국의 수사연구소로 연수생 파견, 수사간부의 초청 및 국제 수사세미나 또는 조직범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과 긴밀한 경찰협력 및 우호관계 유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신원확인 관련제도의 개선

#### 1. 입국사증 부정발급 및 위조 여권의 예방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제도 및 환경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국사증 부정발급’이 52명(3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여권의 위·변조’가 50명(33.3%)으로 나타났다.

입국사증 부정발급의 경우, 실제로 중국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주중한 국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아울러 2001년 2월까지 홍콩 총영사관에서 139명의 재중동포들에게 한국방문 비자가, 현지 한국인 브로커의 뇌물로 인해 발급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 6월 비자 발급 요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있다.

또한 위조여권 등을 통해 입국한 경우 입국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해당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위조여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자여권은 무선수신 RFID 태그를 여권에 내장해 얼굴 사진이나 기타 정

보를 저장하는 것이다.<sup>40)</sup> 여권 위조에 따른 밀입국이나 테러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다. RFID 판독기만 있으면 전자여권에 내장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권 소지자의 위치를 계속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이미 전자 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RFID에 담긴 정보를 공인된 리더기에서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케이스로 특수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위조 등의 외국인범죄와 추가범죄 방지차원에서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0개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다.<sup>41)</sup> 이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현재의 2지문 채취 시스템을 10지문 판독장비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은 2004년 1월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디지털 사진 촬영과 2개 지문 채취제를 도입했다. 이들 자료는 테러 감시자 목록이나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돼 왔고, 2지문 채취 시스템이 연방수사국(FBI)의 10지문 판독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2. 외국인범죄 경력관리제도 개선

외국인범죄 경력관리제도란 국내의 치안유지 및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외국

---

40) 무선인식(RFID) 기술 활용 대상이 물류분야에서 기업의 출입카드, 여권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 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 여권을 시험 발급한 후 오는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 2006. 09. 10, p. 16.

41) 미국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0개 지문을 채취할 계획이라고 AFP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2006. 09. 10, p. 24.

인의 신원과 범죄의 경력을 파악해 개인별 자료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 신고시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고 또한 범죄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범죄경력을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체류자나 무사증입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제도로는 외국인 범죄 경력관리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내 장기거류 외국인이나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는 거류자격 및 국내활동의 내용, 기타 신분등에 비추어 그다지 범죄에 관련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오히려 단기체류자나 무사증입국자등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이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현재의 외국인범죄 경력관리제도로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 의한 국내 치안질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누범 여부, 정상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외국인범죄 경력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원확인 및 공조사항의 방법 중 하나인 외국인에 대한 국내범죄 경력조회는 영문 또는 국문이름과 생년월일로 조회하는데 국문이름은 사실 발음할 때마다 차이가 나게 적어지게 되고, 영문 이름도 철자가 상이하면 조회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즉, 어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거나 강제출국된 뒤 철자를 약간 바꾼 여권이나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전에 지문채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경력조회로는 그 경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외국인범죄 전담 부서에서는 외국인범죄자에 대해 범죄자카드 전산화를 통해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

42) 박상기 외, 형사정책, 전게서, pp. 43-45.

범죄요지를 정리해 넣고 이름, 국적, 성별, 연령, 범죄유형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의 재검토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법무부 업무처리규칙 모두 우리 국민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령 제585호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외국인 출국정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출국정지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제4절 협력수사 환경 조성 및 수사원칙

외국인범죄는 관련 수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탐문수사 및 시민, 동료 외국인의 협조가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고비용 인력송출을 근절하면 불법체류유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평소 대민 친선과 경찰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통, 범죄 피해 예방 등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도우려는 경찰의 적극적인 친선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범죄 발생시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 1. 초동수사와 탐문수사

외국인범죄 관련 강력사건 수사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즉시 현장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최초 신고자 및 피해자 등 관계자들은 우선 확보해야 한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정확한 국적 등을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현장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외국인은 사건현장에 유류된 지문만으로는 용의자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사건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 또는 근로 목적으로 체류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자 및 자료를 확보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주변에서 범행을 한 후 혼자 도피생활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국적의 동료들이 있는 지역으로 도주하여 은신한다. 따라서 탐문수사시 용의자의 거주처 주변 주민 또는 고용업자를 상대로 용의자의 체류목적 및 고용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용의자의 국적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용의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요 참고인들 역시 외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질까 두려워하여 용의자와 함께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용의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동료들의 신속한 신원파악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 2. 용의자 등의 신원파악

용의자들의 이름이 파악되어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표기를 알 수가 없으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정확한 국적과 신원파악이 불가능하

로 용의자 중 외국인 산업연수생인 경우 자신들의 여권을 외국인 산업연수 위탁기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최초 고용업체를 상대로 위탁관리회사를 파악한 뒤 용의자의 여권을 확보하여 정확한 국적과 신원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조선족 교포 등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십지지문 분류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용의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은 선불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발췌되면 명의자인 내국인과의 관계 또는 통화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용의자의 주변인물 및 신원파악에 활용해야 한다.

### 3. 용의자 소재 추적수사

평상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별집, 고시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외국인 관련강력사건 발생시 필수적으로 임검 또는 수색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가려는 속성이 있어 용의자 소지품이 있는 거주지는 필히 잠복수사가 필요하다.

용의자의 정확한 국적과 신원 등이 파악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용의자의 출입국 관계 사실조회 및 출국금지 요청을 신속히 신청한다.

또한 산업연수생의 경우 출국문제 또는 재취업문제로 위탁관리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회사 담당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인 상대 종교단체나 외국인 노동인권 상담소를 찾아가 각종 정보교환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협조하여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면 폭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다민족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이해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외국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다.



## 제 5 장 결론

향후 외국인범죄는 질적, 양적으로 심각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출입국자의 증가,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의 증가와 함께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진출 역시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더해 주는 요소이다. 실제 이 연구의 실증조사에서도 경찰관 상당수가 외국인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범죄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대응능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범 정부차원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크며 경찰의 수사 개선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인범죄의 수사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범죄 수사의 전문성 제고이다.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범죄 수사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범종별 전문화를 위해 외사경찰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사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강화, 수사 장비의 현대화와 수사예산,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경찰협력과 형사사법공조이다. 외국인범죄는 해당국 정부와의 협력 및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관련국들과의 세미나 혹은 수사기법교육 등을 통해 친선 및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범죄 수사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다.

셋째, 출입국·체류관련 제도의 개선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제도 및 환경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국사증 부정발급’이

52명(3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여권의 위·변조’가 50명(33.3%)으로 나타났다.

입국사증 부정발급의 경우, 과거 수백 건의 입국사증이 부정 발급된 사례가 있다. 또한 위조여권을 통해 입국한 경우 입국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해당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위조여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여 이미 도입된 자동여권판독시스템과 더불어 여권위조에 따른 밀입국이나 테러 위협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RFID 여권 및 판독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출입국시 출입국자들을 실시간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디지털 CCTV 시스템 및 이들 영상을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협력수사 환경의 조성이다. 외국인범죄는 관련 수사자료의 미비로 인해 탐문수사 및 시민, 동료 외국인의 협조가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 고용 인력송출을 근절하면 불법체류유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평소 대민 친선과 경찰협력분위기를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교통, 범죄 피해 예방 등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도우려는 경찰의 적극적인 친선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범죄 발생시 수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범죄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면 관련된 폭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응하여 국내 수사관련 제도 및 현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

인 연구라는 한계로 인해 외국인범죄의 범종별, 범죄수법별 세부적인 대책의 제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수사전문화의 대안과 범종별 수사 대책 등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의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경찰대학, 「경찰외사론」, 용인: 경찰대학, 1999.
-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0~2005.
- \_\_\_\_\_,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서울: 경찰청, 2003.
- 김주덕, 「국제형법」, 서울: 육서당, 1998.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1992~2003.
- 박상기외, 「형사정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1994~2005.
- \_\_\_\_\_, 「국적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서울, 법무부, 2004.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용인: 법무연수원, 2004.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2003.
- 배종대,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1998.
- 신진규, 「형사정책 I · II」, 서울: 법문사, 1997.
- 심영희, 「비판범죄론」, 서울: 법문사, 1987.
- 정영석 · 신양균,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96.
- 유병화, 「국제법총론」, 서울: 일조각, 1985.
- 윤덕중, 「범죄사회학」, 서울: 박영사, 1982.
- 중소기업연구원, 「외국인력 활용의 정책연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2002

### <논문>

- 김광효, “강제퇴거의 현실태와 문제점”, 「법무연구」, 제19호, 1992.

- 김병준,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권, 2000.
- 김상경, “외사경찰의 국제성범죄 대응력제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시평, “외국인 노동자유입에 따른 대책소고”, 법조, 제414호, 1991.
-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조선대 법학논총, 제6호, 2001.
- 김인숙, “외국인범죄와 처우에 관한 연구”,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제13권, 2000.
-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 준,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대책”, 「현안분석」, 제101호, 1995.
- 김철완, “외국인 취업자 범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노병숙, “개방화시대의 외국인 불법체류”, 「수사연구」, 1996. 5월호.
- 박춘희, “불법체류외국인의 실태와 범죄”, 「수사연구」, 1996. 5월호.
- 백진현 · 조균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변찬우, “외국인범죄 수사상의 제 문제”, 「검찰」, 통권 제106호, 1995. 6.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1호, 2003.
- 손동권 · 김한균, “출입국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6.
- 양문승 · 이기호,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실태와 관리방안”, 치안연구소, 1996.
- 장준오, “불법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최인섭 · 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황인정,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검찰, 통권 제104호, 1992.

<외국문헌>

Child, John, *Organizational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ic Choice*, *Sociology* (January 1972)

Crane, Keith, Asch, Beth J., and Heilbrunn, Joanna. Z., *The Effect of Employer Sanct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Santa Monica: The Rand, 1990.

Fix, Michael and Hill, Paul T., *Enforcing Employer Sanctions: Challenges and Strategies*, Santa Monica: The Rand, 1990.

Weston Paul B. and Kenneth M. Wells, *Criminal Investigation*, New York: Prentice Hall, 1990.

菊田辛一, 犯罪學, 輿成文堂, 1971.

## *ABSTRACT*

### *A Study on Reform Measures for Investigation of Foreigners' Crimes*

*Park, Sang Joon*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significance and conditions of foreigners' crimes and thereupon, empirically analyze investigation of foreigners' crimes centering around our police investigation and thereby,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for our police investigation of foreigners' crim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many of our policemen were seriously consciousness of foreigners' crimes. However, it was disclosed that the capacity of our police mostly in charge of foreigners' crimes was lower in terms of their responses to them.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pan-governmental measure against foreigners' crimes, while it is urgently required of the police to improve their capacity of investigation.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to this e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essential to enhanc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 against foreigners' crim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ever-sophisticating foreigners' crimes, it is necessary to professionalize investigators in charge of foreigners' crimes.

Second, it is necessary for our polic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criminal justice collaboration. In many cases, foreigners' crimes need to be investigated through international a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s with the relevant foreign governments. Accordingly, our police is required to consolidate the professional and friendly relationships with such foreign governments through seminars or investigation technique education programs, which are deemed greatly conducive to enhancement of our police capacity of investigating foreigners' crimes.

Third, the identity check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response to increasing foreigners' crim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 addition to the automatic passport reading system, such systems useful to effective checking of illegal immigration or terrorism activities as RFID passport reader, digital CCTV system or a real-time video recorder for travelers and a databasing/classifying/ retrieving system for the recorder.

Fourth, it is desirable to create a cooperative investigation environment, because foreigners' crimes absolutely require information snooping and cooperation from citizens and other foreigners due to lack of investigation records.

This study was too general to discuss such detailed aspects of foreigners' crimes as specific anti-crime measures by type or skill of crime, 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research into more alternatives to professionalize foreigners' crime investigation and detailed investigation techniques by type of crime.



##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를 최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견을 경청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경찰의 발전을 위해 설문의 내용을 잘 읽으신 다음,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축복과 화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9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전공

지도교수 : 김보환

연구자: 박상준

연락처 : 011-9873-4934

※ 외국인범죄 관련 일반 사항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외국인범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외국인범죄에 대해 느끼시는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심각 ② 심각 ③ 보통 ④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국제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국인범죄의 증가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증가할 것이다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③ 현재 상태를 유지  
④ 약간 감소할 것이다 ⑤ 매우 감소할 것이다
3. 현재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이다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4. 귀하는 수사 관련(감식, 사이버 등등) 교육을 몇 회 받으셨습니까?  
① 4회 이상 ② 3회 ③ 2회 ④ 1회 ⑤ 없음  
▷ 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명은? \_\_\_\_\_  
▷ 교육효과는?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없음 ⑤ 매우 없음
5. 외국인범죄 관련 수사 교육의 경우, 가장 중요한 내용은 ?  
① 외국인 신원파악 요령 ② 관련기관 협조 및 절차 ③ 기본범죄수사요령  
④ 외국어 교육 ⑤ 외국인범죄수법 ⑥ 기타 \_\_\_\_\_

※ 경찰의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6. 외국인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 연령 등의 개인 환경적 원인 ② 경기변동, 빈곤 등의 경제적 원인  
③ 문화갈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회문화적 원인 ④ 기타
7. 외국인범죄 수사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① 언어 및 문화의 장벽 ②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확보의 문제점  
③ 국외 수사 (신원 확인 요청 등) ④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  
⑤ 외사와 형사의 업무한계 ⑥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 공조  
⑦ 시민의 협조 ⑧ 기타 \_\_\_\_\_
8. 외국인범죄 관련 외국인 관리상의 문제점은?  
①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부족 ② 불법 체류자 증가를 못 막는 관리체계  
③ 관리체계의 다원화(경찰, 검찰 등 10여개의 국가기관에서 직·간접으로 관리)

9. 경찰의 외국인범죄 수사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화의 정도는?

- ① 매우 전문화되었다      ② 전문화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전문화되지 못하였다      ⑤ 매우 전문화되지 못하였다

10. 전문화가 부족하다면 해당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휘관의 관심 부족      ② 외국어와 수사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부족  
③ 전문교육의 미흡      ④ 예산부족      ⑤ 수사의 업무과중

11.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야간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      ② 통역 예산부족  
③ 통역자의 통역능력(수사용어)부족      ④ 통역비 지급기준이 낮음  
⑤ 통역비 지급절차 부적절      ⑥ 통역자의 통역기피  
⑦ 소수언어 통역자 확보      ⑧ 기타 \_\_\_\_\_

12. 외국인범죄 수사 통역시 주로 활용하는 통역원은?

- ① 경찰서외사요원      ② 경찰서 지정 통역(자원봉사 등)원  
③ 지방청외사요원      ④ 주변의 통역 가능 경찰관  
⑤ 관내 지인      ⑥ 기타 \_\_\_\_\_

13. 다음 중 외국인범죄 수사 관련 제도 및 환경 중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90일 이하 단기체류외국인 신원확인      ② 90일 이상 거주외국인 신원, 동태 파악  
③ 여권의 위·변조      ④ 입국사증 부정발급  
⑤ 2004년 8월 시행된 고용허가제      ⑥ 기타 \_\_\_\_\_

14. 다음 중 외국인범죄 관련 경찰 내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기본 수사 능력 부족      ② 범종별 수사 전문화의 미흡  
③ 수사 인력의 부족      ④ 수사 예산의 부족  
⑤ 수사 장비의 현대화      ⑥ 경찰서간 수사 공조  
⑦ 통역 지원      ⑧ 기타 \_\_\_\_\_

15.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외국인범죄 수사관련 개선방안은?

- ① 통역지원 체계의 개편      ② 외사경찰 조직 구조 개편  
③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간의 상설협의기구  
④ 외국인의 신원확인 대책      ⑤ 외국인범죄 수사경찰의 전문화  
⑥ 수사 예산, 인력, 장비 등 지원      ⑦ 수사 교육의 개선

16. 외사경찰을 개편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개편 찬성만 응답하십시오.)

- ① 현재 외사경찰의 수사체제에 수사 인력과 장비만 보강한다.
- ② 수사·형사과에서 외국인 수사를 전담하고 통역 등만 외사에서 지원한다.
- ③ 범죄의 성격에 따라 국내 수사경찰과 외사경찰의 수사범위를 구분하여 범죄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기타 \_\_\_\_\_

17. 귀하가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경찰의 외국인범죄수사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

※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18. 귀하의 연령(만으로)은?

-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19.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    ⑥ 경정 이상

20. 귀하의 총 경찰경력은?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5~20년    ⑥ 21년 이상

21. 귀하의 수사·형사경력은?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10년    ④ 11~15년    ⑤ 15~20년    ⑥ 21년 이상

22.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는?

- ① 경무    ② 생활안전    ③ 수사    ④ 형사    ⑤ 경비    ⑥ 교통    ⑦ 정보    ⑧ 보안(외사)    ⑨ 기타

23. 귀하의 근무지는?

- ① 경찰서    ② 지방경찰청    ③ 경찰청    ④ 경찰교육기관    ⑤ 기타\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